

##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과 한국정부의 역할

정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큰 이벤트였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의 북미정상회담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 세계사적 이벤트임이 분명하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세기적 이벤트라 할 만한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에서도 이를 성공적인 회담으로 다루게 되었다. 북미정상 간 합의는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오늘 이 칼럼의 주제인 남북경제협력의 향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합의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합의문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만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합의문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하고 틀림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할 것”이며 “미국인들과 세계 기관들을 통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분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정상 간의 상호 의지는 확인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CVID가 합의문 문구에 없다는 것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향후

협상 역시 이 이슈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행동들이 가시화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CVID에 준하는 비핵화를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본인의 명운을 걸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 이행과 더불어 중간선거 이전의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미중간선거 이전에 빅 이벤트급 비핵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평가하느냐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이다. 현재 미국의 여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미 언론들의 공방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과거 행태로 인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전문가들이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미국 내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을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할만한 비핵화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판문점에서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건은 미국이 언제 대북제재를 해제하느냐이다.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 제재를 그만둘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이어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크고 강력한 300개의 제재를 준비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CVID를 가능하게 할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기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와 미국이 현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저촉된다. 개성공단 운영 관련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비롯해 토지임대료, 기업소득세 등 북측으로의 현금 유입은 미국을 비롯해 유엔안보리도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금강산 관광 역시 관광의 대가로 대규모 현금이 북측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단순위탁가공이나 수산물, 농산품의 교역도 금지대상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산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대북제재는 그 대상과 폭이 2000년대 초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와 현저히 다르다. 현재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과거에 추진했던 단순위탁가공이나 농수산물 교역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을 독려하고 향후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한반도신경제구상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기존의 남북경협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속도를 봐 가면서 유엔안보리를 비롯해 미국과 남북경제협력 사안별로 예외적 조치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제재위원회의 별도 검토를 통해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 등은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 물류망이 활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 간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만이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남북경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해체에 달려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정도가 남북경협 재개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